

정보 무늬(QR코드) 이용 시, 음성으로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아이폰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보도자료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

보도시점: 2025. 12. 16.(화) 19:00

배포: 2025. 12. 16.(화) 18:55

국민께 보고드립니다-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 “빛나는 문화 강국, 향상된 국민권익”

- 국민권익위, 국민주권정부 실현 위한 2026년 중점 추진과제 발표
-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으로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 구축
- 비긴급 상담전화 국민콜 110 통합으로 국민 불편 신속 해소 및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확대를 통한 사회적 약자 권익구제 확대
- 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및 국민이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실시
- 국가청렴도(CPI) 20위권 안착을 위한 반부패 법·제도 정비 등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16일) 세종컨벤션센터(4층 국제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하여 국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한 2026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포함한 150여 명이 참석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재명 정부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3대 추진전략인 ‘▲선제적·현장 중심 대응으로 국민 고충 해소, ▲국민 목소리에 기반한 제도개선 및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반부패 법·제도 정비 및 청렴문화 확산’ 아래 11개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국민권익위 중점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해결한다. 국정과제, 공약사업 등 주요 정책추진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집단갈등을 적시에 발굴하고, 관계기관이 모여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 집단민원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둘째, 비긴급 상담번호를 110으로 통합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콜 110 한 통으로 가장 적절한 상담번호로 연결해주는 서비스의 연계 대상을 2026년 하반기부터 현행 150개에서 697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는 110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여 국민이 정부와 더욱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국민이 민원을 더 쉽게 신청하고, 공무원은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AI 기반 국민권익플랫폼을 구축한다.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AI 기술을 도입하여, 2027년부터는 실시간 대화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재난 관련 긴급 민원 우선 배정 및 중복 민원 자동 병합 등을 통해 민원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지원한다.

* 챗봇처럼 민원인과 대화를 통해 양방향 소통하는 민원 전용 AI 모델

넷째, 국민 삶의 기반을 강화하고 모두가 잘 사는 공정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국민 체감형 일상 속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싱크홀 등 대형 재난으로 인한 피해배상 강화, 사회안전망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채용 공정성 강화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과제를 발굴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

다섯째,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활성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고도화로 국민의 권익을 신속히 구제한다. 사회적 약자가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인뿐만 아니라 ‘참가인’과 ‘청구하려는 자’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 추진한다. 또한, 청구인이 모바일이나 컴퓨터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구술심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2026년 상반기부터 원격화상회의 서비스를 운영한다.

여섯째, 반부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여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를 엄중히 처리한다.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근절,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 등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어떤 내용의 신고를 하든 같은 수준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규정을 전면 정비할 예정이다.

일곱째,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미래세대 청렴교육을 강화한다. 전체 행정기관의 부정수급 이행실태 점검 데이터를 분석하여 단계별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교육재정·지방재정 등 고위험분야는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세대가 어린시절부터 청렴·윤리의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초·중·고·대학생 대상 청렴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찾아가는 청렴체험교실’*, ‘대학 청렴 정규교과 개설’ 등 연령별 맞춤형 청렴교육도 확대한다.

* 찾아가는 청렴체험교실 : 초·중·고로 직접 찾아가는 참여·체험 형태 교육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구축을 통해 국민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보다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비긴급 상담번호 110으로 통합, AI 국민권익 플랫폼 구축 및 제도개선, 신속한 행정심판 등 중점추진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우리나라를 국가청렴도(CPI) 20위권에 안착시키겠다.”라고 덧붙였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광석 (044-200-7111)
		담당자	서기관	박정희 (044-200-7112)
		담당자	사무관	손정아 (044-200-7113)
담당 부서 (고충민원)	민원조사기획과	책임자	과 장	윤영국 (044-200-7311)
		담당자	사무관	김기웅 (044-200-7320)
담당 부서 (비긴급상담번호 통합)	110통합운영과	책임자	과 장	양동훈 (02-2100-5101)
		담당자	사무관	김경민 (02-2100-5023)
담당 부서 (AI플랫폼, 제도개선)	제도개선총괄과	책임자	과 장	최상근 (044-200-7211)
		담당자	사무관	김유정 (044-200-7212)
담당 부서 (행정심판)	행정심판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덕희 (044-200-7811)
		담당자	서기관	전인혜 (044-200-7814)
담당 부서 (부패 방지, 미래세대 교육)	청렴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박혜경 (044-200-7611)
		담당자	서기관	전이슬 (044-200-7613)
담당 부서 (신고처리·보호·보상)	심사기획과	책임자	과 장	홍영철 (044-200-7691)
		담당자	사무관	방경아 (044-200-7694)
담당 부서 (미래세대 교육)	미래세대 교육 T/F팀	책임자	팀 장	임한나 (043-901-6161)
		담당자	주무관	배유진 (043-901-616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국민권익위 #업무보고 #국민주권정부 #중점추진과제 #부패방지
#고충처리 #제도개선 #행정심판 #2026년 업무보고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선제적·현장 중심 대응으로 국민 고충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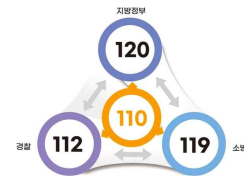
국민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선제적 해소



체계적인
취약계층 보호



비긴급 상담번호는
국민콜 110



국민 목소리에 기반한 제도개선,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 구제

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운영



국민의 정책참여 확대



일상 속 제도개선



신속·편리한 행정심판



반부패 법·제도 정비 및 청렴 문화 확산

반부패 법·제도 강화



신속·정확한
신고 사건 처리



신고자 중심의
공익보호 환경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 확산



국민권익위원회